

신문 모니터

- 문서번호 부산총감연2020-0325-신문03
-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
- 제 목 공천과 경선이 시끄러운 지역이 뉴스에 많이 나온다,
공천 보도에만 나오는 지역구, 공약 보도에도 보였으면
- 날 짜 2020년 3월 25일(수)

공천과 경선이 시끄러운 지역이 뉴스에 많이 나온다. 공천 보도에만 나오는 지역구, 공약 보도에도 보였으면

.....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는 부산지역 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과 지상파방송 메인뉴스(KBS 부산, 부산MBC, KNN 저녁종합뉴스)를 주요 대상으로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3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5일 간 진행한 신문모니터 3차 보고서이다.

분석기간	3월16일(월)부터 3월20일(금)까지
분석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분석기사	제목은 물론 내용에서도 “선거”, “총선”, “지역구”, “지지율”, “유세” 등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기사 모두

△ <표1> 부산지역 일간지 4·15 총선 관련 보도 양적 분석 개요

3월 셋째 주, 부산일보 선거기획 보도 선보여

3월 셋째 주 부산지역 신문의 총 보도 수는 745건이었고 이 중 99건(13.2%)이 선거 관련 보도였다. 선거 관련 보도 수를 비교하면 국제신문 43건, 부산일보 56건으로 부산일보가 13건 더 많았다. 총 보도 수 대비 선거 관련 보도 수 비중으로 봐도 국제신문 10.6%, 부산일보 16.4%로, 3월 셋째 주엔 부산일보에서 선거 관련 보도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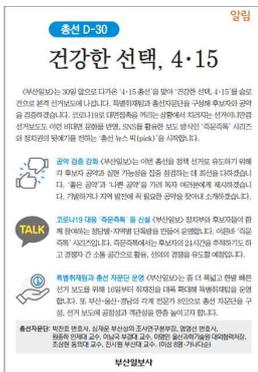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보도유형은 기획 보도와 사실 확인 보도다. 부산일보는 3월 16일 1면에서 ‘건강한 선택, 4·15’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선거 기획 보도의 시작을 알렸다. 3월 셋째 주

부산일보에선 3건의 기획보도와 1건의 사실 확인 보도가 있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 도 량	선거 보도 수	43	56	99
	총 보도 수	405	340	745
	총 보도 수 대비 비중	10.6%	16.4%	13.2%
보 도 유 형	스트레이트	38	45	83
		88.3%	80.3%	83.8%
	기획, 연재, 특집	0	3	3
		0.0%	5.3%	3.0%
	인터뷰	0	0	0
		0.0%	0.0%	0.0%
	사설	2	3	5
		4.6%	5.3%	5.0%
	칼럼	1	1	2
		2.3%	1.7%	2.0%
	사진	2	2	4
		4.6%	3.5%	4.0%
사실확인보도	0	1	1	
	0.0%	1.7%	1.0%	
기타	0	1	1	
	0.0%	1.7%	1.0%	

△ <표2>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건수와 비중

부산일보 ‘건강한 선택, 4·15’ 총선 기획 선보였지만, 영양가 높은 정보 여전히 부족



△ 부산일보, 3/16, 1면

부산일보는 총선 30일을 앞둔 지난 16일에 특별취재팀과 총선거자문단을 구성해 후보자와 공약을 검증하는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SNS를 활용해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즉문즉답’ 시리즈, 정치권 뒷얘기를 전하는 ‘총선 뉴스 픽(pick)’을 시작한다고도 알렸다. 유권자들이 총선 보도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시도는 좋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기획 보도 속 정보의 영양가는 그다지 높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생긴 비대면 문화를 반영한 ‘즉문즉답’ 기획은 ‘후보자에게 21대 총선은 무엇인지’ 혹은 ‘버킷리스트’를 묻는 재미있는 질문과 여야 후보자의 참신한 대답을 소개해 유권자의 눈길을 끌었다.

공천과 경선이 시끄러운 지역이 신문에 많이 나온다 선거보도 조차도 노이즈마케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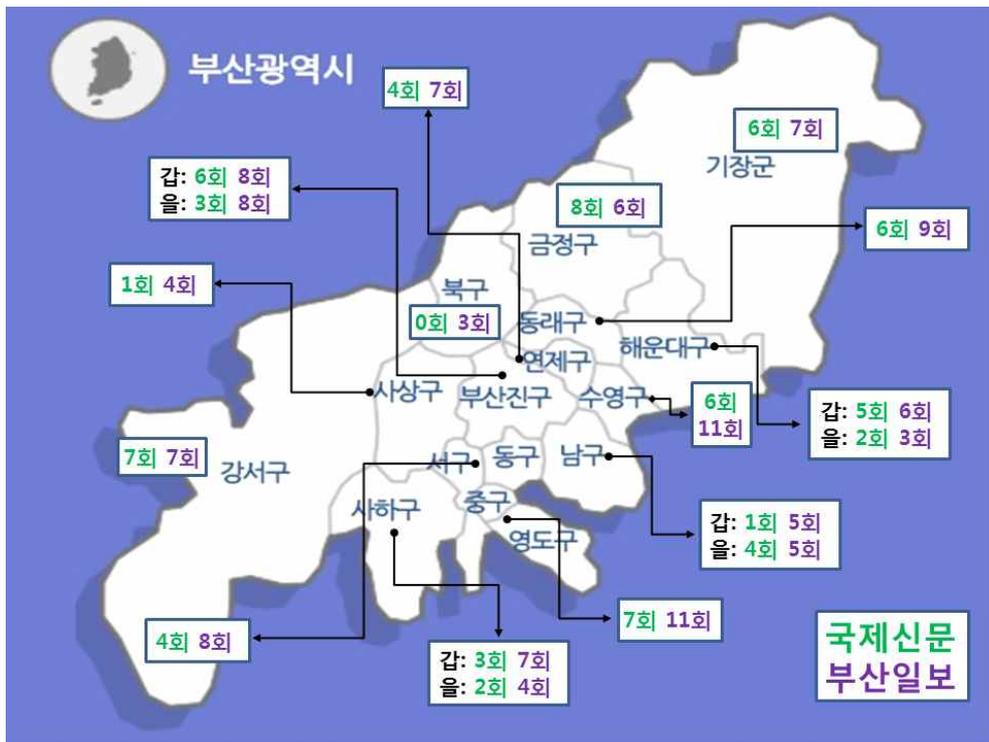
3월 셋째 주 정책·공약 보도는 7건(7.0%)에 그친 반면 공천 관련 보도는 47건(47.4%)이었다. 여전히 선거보도에서 공천 관련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지만, 3월 둘째 주(공천 관련 보도 63.1%)와 비교했을 때 공천 관련 보도는 15.7% 감소했다. 선거 전략 보도는 12.6%에서 26.2%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3월 셋째 주 지역 신문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후보자 기본 정보	0	0	0
	0.0%	0.0%	0.0%
정책 공약	4	3	7
	9.3%	5.3%	7.0%
후보자 자질	11	17	28
	25.5%	30.3%	28.2%
공천 관련	20	27	47
	46.5%	48.2%	47.4%
선거 전략	16	10	26
	37.2%	17.8%	26.2%
선거 판세 여론조사	12	21	33
	27.9%	37.5%	33.3%
후보 동정	1	3	4
	2.3%	5.3%	4.0%
선거법 관련	1	1	2
	2.3%	1.7%	2.0%
시민 사회 동향	0	1	1
	0.0%	1.7%	1.0%
기타	1	4	5
	2.3%	7.1%	5.0%
합계	66	87	153

△ <표3>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에서 보도 주제(*중복집계)

3월 셋째 주 선거보도를 지역구별로 구분해 보면, 중·영도구가 20회로 가장 많이 보도됐고 수영구가 17회, 동래구가 15회로 그 뒤를 따랐다. 북·강서갑은 국제신문은 0회, 부산일보는 3회 언급되어 중·영도구와는 17회 차이가 났다.

지역 신문에서 부산지역 선거구는 균형 있게 노출되지 않는다. 정당과 후보자가 생산하는 뉴스를 따라가다보니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곳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별 탈 없는 곳은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않은 채 선거보도에서 사건만 남을까 우려된다.



△ 부산지역 신문 지역구 언급 빈도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중구영도구	7(7)	13(9)	20(16)
서구동구	4(4)	8(6)	12(10)
부산진구갑	6(4)	8(4)	14(8)
부산진구을	3(2)	8(5)	11(7)
동래구	6(3)	9(4)	15(7)
남구갑	1(0)	5(2)	6(2)
남구을	4(2)	5(3)	9(5)
북구강서구갑	0(0)	3(0)	3(0)
북구강서구을	7(5)	7(5)	14(10)
해운대구갑	5(3)	6(2)	11(5)
해운대구을	2(1)	3(1)	5(2)
사하구갑	3(3)	7(4)	10(7)
사하구을	2(0)	4(0)	6(0)
금정구	8(5)	6(4)	14(9)
연제구	4(4)	7(6)	11(10)
수영구	6(3)	11(5)	17(8)
사상구	1(0)	4(1)	5(1)
기장군	6(6)	7(4)	13(10)

△ <표4>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에서 지역구 등장 빈도(*중복집계)

*괄호 안은 공천 관련 보도 수

한편, 3월 셋째 주 공천 관련 보도 중 국제신문 <불출마 현역, 노골적 내 사람 심기… ‘막장’된 통합당 공천>(3/16, 9면), <급조된 후임에…부산 보수 ‘계보’가신 정치’ 존폐 기로>(3/17, 9면) 기사는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짚어 눈에 띄었다. 지난 주에는 공천 과정을 다루면서 불만이 있는 후보의 말이나 분위기를 제목에 인용하는 보도가 제법 있었는데 차라리 의혹과 불만에 대해서는 언론이 직접 평가를 내려준 점에서 지난 보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했다고 본다.

불출마 현역, 노골적 내사람 심기… ‘막장’된 통합당 부산공천

수령 유재중 '정병민 밀어주기' 의정홍보 전파로 경선 후보 급정은 원정회 포기설로 시끌 백중현 "경선 하자 공천사기극"

미래통합당 부산 금정 원정의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직전 '경선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급정이 들끓고 있다. 부산 수당에서는 컷오프된 유재중 의원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측근인 정병민 전 시의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부산 불출마 의원들의 '세습정치' 상황까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 당 내부에서는 2024 총선 패배의 빌미가 됐던 '달린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 금정 공천에서 탈락한 백중현 전 부산시의회 의장은 15일 '일찍부터 (김종현 원정회) 중립명은 경선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위 '밀러리'라는 얘기가 퍼다녔었다'면서 '후보자 3명 중 김종현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저를 밀려다시키고, 수족같은 원정의 후보를 지원하기까지 끈 끈강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본지가 부산 경선 참가 인사를에게 확인한 결과 부산 경선이 시작된 이날 급정에는 경선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찍의 페이스메이커' 등이 확인됐으며 지역 정치는 크게 들끓는 분위기다.

공천위원회 김세현 의원 측은 공천 과정에 대해 '인 손을 댄다고 밝혀왔으나' 김 의원이 직접 집행된 규정이 반영됐을 경우 입은 단정하다는 말이 나왔다. 지역에서는 '의원의 초선에 구형정 재발까지 한



통합당 심재철 간담회 미래통합당 심재철(오른쪽)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흥우 기자

원 후보의 율드한 이까지 등 때문에 김 의원이 대안으로 김종현 후보를 발굴했고, 그에게 단수공천을 주긴 부당이 커 경선을 실시키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실제 경선이 이뤄질 경우 산란한 김 후보가 자진 불참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장 측 주장이다.

본지는 김세현 의원과 원 후보의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종현 후보는

"전에 모르셨다"고 말했다. 통합당 조직국 관계자는 "특정지역 후보의 경선 불참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모든 내용은 17일 부산지역 경선 결과 발표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령 유재중 의원의 '전방인 밀어주기'도 논란을 낳고 있다. 유 의원은 경선 이 양버린 지난 12일 지지자 등에 보낸 문자를 통해 전 예비보장을 지지하며 '경선에서 전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전 후보는 유 의원 사무원이 있는 건물에 현수막만 바꿔달라고 유

의원이 의정홍보를 하던 전화번호로 전 후보 후보 문자가 심포했다. 유 의원은 "법적으로 지지선언 할 수 있고, 지역을 지켜온 인물이 되는 게 맞다고 봤다"고 항변했다. 이와에도 더해 이진복 의원의 김교한 전 보좌관, 기정 윤상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정동만 전 시의원에 대한 자간접 지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육근을 통해 장지영 의정백을 유 의원에 불출마 의원의 행태를 놓고 '예산 의사가 되겠다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을 수놓겠다는 비란도 거세다.

정병민 밀어주기

부울경 "공천 불복" 집단행동 움직임

통합당 PK 이주영-김재경 중심 황 대표에 "반복-경선보장" 요구 및 중영도 김용원 "경선결과 불복"

부산 울산 경남(PK) 지역 예비보장을 둘러싼 통합당 총선 직격전이 뜨겁게 달아나고 있다. PK 불복 공 알세은 미래통합당 공천 불복' 집단 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통합당에 따르면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된 행역 의원 일부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단체 행동 등을 통해 심려 행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5선 이주영 전 시정운영장 '부산진갑 공천을 양보해 (경남 창원 대산보좌) 의원과 4선 김 달라고 촉구했다.

경원 (경남 진주) 의원 등 PK 공천의 한 번 다 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 중영 원이 서 있다.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이 들은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을 대신해 정한 김 에비후보는 '김이 김비오 에비후 보에게 요구했다. 컷오프 의원 14명 중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이 절반 가 랑 내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공천 불복 후보들은 공천위가 경선 보 장 요구를 거절하면 '무소속 연'을 가 리고 주장했다.

를 선언한 총선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 무개당 있는 PK 후보들이 대량에 합류할 경우 PK 의결을 노리는 통합당 총선 직격전이 뒤를 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PK 불공 알세은 미래통합당 공천 불복' 집단 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통합당에 따르면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된 행역 의원 일부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단체 행동 등을 통해 심려 행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5선 이주영 전 시정운영장 '부산진갑 공천을 양보해 (경남 창원 대산보좌) 의원과 4선 김 달라고 촉구했다.

경원 (경남 진주) 의원 등 PK 공천의 한 번 다 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 중영 원이 서 있다.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이 들은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을 대신해 정한 김 에비후보는 '김이 김비오 에비후 보에게 요구했다. 컷오프 의원 14명 중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이 절반 가 랑 내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공천 불복 후보들은 공천위가 경선 보 장 요구를 거절하면 '무소속 연'을 가 리고 주장했다.

경선 돌입 통합당 후보들 마지막 지지호소

12. 070. 051 모르는 전화 직 받아주세 요"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부산 울산 경 남 지역 후보 선출을 위한 '슈퍼 일요일'

였다. 같은 지역 하배경 후보는 지역 주민과 개별적으로 찍은 사인을 올렸고, 조준형 후보도 지지호소에 주력했다. 곡곡(서동) 후보는 친형이자 영화

△ 국제신문, 3/16, 9면

국제신문, 3/16, <불출마 현역, 노골적 내 사람 심기… ‘막장’된 통합당 공천>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00316.2200900589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00317.22009006486>

국제신문, 3/17, <급조된 후임에…부산 보수 ‘계보’가신 정치’ 존폐 기로>

국민 생계와 직결된 재난기본소득, 정치권 공방 중계 전에 충분한 정보를 달라

17일 두 신문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총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후보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보도는 국제신문에 3건, 부산일보에 2건이 담겼다.

<기사목록>

재난기본소득, PK총선 쟁점 부상, 국제신문, 3/17, 1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00317.33001006529>

여당 “자영업 등돌릴라” 도입 목소리…야당 “총선용 의구심” 제동, 국제신문, 3/17, 8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00317.22008006365>

[국제칼럼] 4·15총선을 기본소득 공론장으로 만들자 /이경식, 국제신문, 3/17, 2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00317.22023006306>

김영춘 ‘단일대오’ - 서병수 ‘단기필마’, 부산일보, 3/17, 5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1619464818098>

[팩트 체크]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가능할까, 부산일보, 3/17,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1619342088108>

두 신문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전에, 이 의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통합당의 시각 차이에 주목했다.

국제신문은 <재난기본소득, PK총선 쟁점 부상>(3/17, 1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후보들은…이슈화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라고 썼고, 부산일보도 <[팩트체크] 예산 51조 원·별도 입법 필요…실현 가능성은 미지수>(3/17, 8면)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 주장과 김미애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말을 함께 실었다.

국제신문은 <여당 “자영업 등 돌릴라” 도입 목소리…야당 “총선용 의구심” 제동>(3/17, 8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하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부산지역 자영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 분야와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고 상황을 짚은 뒤, 자영업 종사자의 민주당 지지율이 평균 이하인 상황을 언급해 설득력을 더했다. 이런 서술은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주장한다’고 전달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이다. 어떤 의제가 등장했을 때 여야 간의 공방만을 다루기보다는 정책을 내놓은 배경이나 실현 가능성을 언론이 관점을 가지고 평가한 점은 반갑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가 먼저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말고도 재난기본소득이 더 절실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있다. 언론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특수고용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던졌으면 어떨까 한다.

부산일보 <[팩트체크] 예산 51조 원·별도 입법 필요…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3/17, 8면)는 팩트체크라고는 했지만 직접 적극적인 검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정치인 중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누가 처

을 제안했는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떤지, 찬반 여론은 어떤지를 정리했다. 전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견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의제로 등장하면서 독자에게는 기본적인 정보부터 필요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재난수당과 기본재난소득 간 지급 대상과 재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 시민들에게 생소한 용어와 당장 드는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치면 기사를 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한편, 국제신문은 <국제칼럼> 4·15 총선을 기본소득 공론장으로 만들자>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진보·보수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기껏 통과시킨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바르게 활용 못하는 건 언론도 마찬가지

국제신문은 16일자 8면 <정의당 ‘마이웨이’…범진보 연대 균열>에서 범진보 연대 균열의 책임을 정의당의 ‘마이웨이’ 행보로 돌렸다. 이 기사는 “연합의 핵심 파트너인 정의당은 민주당의 참여 제안을 거부했다. (중략) 여권 연대 균열이 민주당의 과반 의석 목표를 발목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썼고, 기사 말미에 “정의당의 전 지역구 후보 출마는 ‘진보 표심’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라고 썼다. 심상정 대표의 말을 인용해 정의당의 입장을 함께 다뤘지만, 기사 제목과 내용의 처음과 끝에는 여권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고 있다. 이는 언론이 정치를 두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여태껏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꼽수정당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실어온 언론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을 연대 균열의 책임자로 돌리는 태도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 국제신문, 3/16, 8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00316.22008005847>

정의당 ‘마이웨이’…범진보 연대 균열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더불어민주당	24	43	67
	55.8%	76.7%	67.6%
미래통합당	34	49	83
	79.0%	87.5%	83.8%
정의당	2	9	11
	4.6%	16.0%	11.1%
미래한국당	4	5	9
	9.3%	8.9%	9.0%
비례연합정당	4	6	10
	9.3%	10.7%	10.1%
국민의당	2	2	4
	4.6%	3.5%	4.0%
민생당	1	7	8
	2.3%	12.5%	8.0%
민중당	0	1	1
	0.0%	1.7%	1.0%
무소속	2	7	9
	4.6%	12.5%	9.0%
기타	1	0	1
	2.3%	0.0%	1.0%

△ <표5>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에서 등장 정당(*중복집계)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경마성 보도	1	3	4
	2.3%	5.3%	4.0%
가십/이벤트 보도	3	3	6
	6.9%	5.3%	6.0%
일방중계 보도	0	0	0
	0.0%	0.0%	0.0%
양당/다방 단순보도	1	0	1
	2.3%	0.0%	1.0%
양대정당중심 보도	11	22	33
	25.5%	39.2%	33.3%
정치혐오 보도	1	2	3
	2.3%	3.5%	3.0%
전투/경기 표현 보도	7	10	17
	16.2%	17.8%	17.1%
지역/연고주의 보도	7	11	18
	16.2%	19.6%	18.1%
익명보도	1	3	4
	2.3%	5.3%	4.0%
따옴표 보도	7	4	11
	16.2%	7.14%	11.1%
오보	1	0	1
	2.3%	0.0%	1.0%

△ <표6> 매체별 4·15총선 관련 유해보도(*중복집계)

경선 한창일 땐 여성·청년 가산점 비판하는 목소리 신고, 경선 끝나니 기울어진 운동장 인정하는 언론

두 신문은 모두 여성·청년 공천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국제신문은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를 분석한 <가산점 효과 없었다...현역 5곳 승리 '불패 재확인'>(3/18, 8면)에서 “상대점수에서 절대점수로 바뀐 가산점의 영향력은 승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썼다.



△ 국제신문, 3/18, 8면

부산일보는 <20대는 '0'...안 바뀌는 '중년 남성' 독식>(3/18, 6면)에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여성 공천은 배 가까이 늘었지만, 비율로 보면 30% 이상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 “여야 정당들이 이번에 20, 30대 청년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했지만, PK에는 단 1명만 수혈됐다.”, “양당 모두 '청년·여성 정당'을 표방했지만 '중년 남성 독식'이라는 정치권의 낡은 인재 추천 공식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라고 썼다.

20대는 '0' ... 안 바뀌는 '중년 남성' 독식

PK 40곳 민주·통합 75명 확정 평균 55세·30대도 1명 불과 법률키·교수 직업군 강세 지속

미래통합당이 17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23곳의 총선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PK 40개 선거구에서 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75명이 이날로 확정됐다.

이들 PK 후보들의 평균 나이는 55세. 부산 지역 후보 34명의 평균은 53세였고, 울산과 경남은 56세로 동일했다. 여성은 현재까지 7명(9%)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가 55.5세이고,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가 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 공천은 배 가까이 늘었지만, 비율로 보면

○ 숫자로 보는 PK 본선 후보 특징

구분	숫자
평균 나이	55
20대 후보자 수	0
최연소 후보 나이	39 (최지은·부산 북강서울)
최고령 후보 나이	74 (장기표·경남 김해울)
여성 후보자 수	7 (부산 7/울산·경남 0)

30% 이상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

연령별로는 △20대 0명 △30대 1명 △40대 12명 △50대 44명 △60대 17명 △70대 1명 등이다. 여야 정당들이 이번에 20, 30대 청년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했지만, PK에는 단 1명만 수혈됐

다. 양당 모두 '청년·여성 정당'을 표방했지만 '중년 남성 독식'이라는 정치권의 낡은 인재 추천 공식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최연소 후보는 북강서울에 출마표를 던진 민주당 최지은(39세) 후보였고, 최고령자는 경남 김해울에 출마한 통합당 장기표(74세) 후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법률가, 교수 등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는 점이다. 부산시의원 출신인 황보승희(중영도), 이주환(연제), 정동만(기장), 전봉민(수영) 후보 등이 통합당 공천을 받았고, 울산 중구와 동구에 시도 구청장을 지낸 박성민, 권영호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했다.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부산대가 '초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재강, 류영진, 박성현, 유영민, 최인호,

조경태, 김경지, 김해영, 강윤경, 배재정 후보 등 11명이 부산대 출신이다. 울산·경남에서는 울산이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 3명, 경남이 정정식 후보를 비롯해 7명이 서울대를 나왔다.

관심을 모은 통합당 '현역 물갈이' 비율은 이날 경선에서 현역들이 대거 승리하면서 소폭 낮아졌다. 통합당의 경우 이날 이현승(부산진울), 하태경(해운대갑), 이재익(울산 남갑),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화원),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경선에 승리하면서 PK 현역 26명 중 본선에 나서지 못한 의원은 모두 1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역 교체율은 최종적으로 5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0명의 현역 중 경선을 앞두고 있는 김정호(김해울) 의원을 제외하고 8명이 공천을 확정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 부산일보, 3/18, 6면

<지역구 공천은 적고 비례 당선권 없고 PK 여성 수난시대>(3/18, 8면)에서는 “그야말로 부산·울산·경남(PK) 여성계의 수난시대다.”, “지역구 여성 공천율은 역대 총선 때보다는 높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비례대표 당선권에는 순수PK 여성이 단 1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썼다. 이날까지 부산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자 7명의 공천이 확정됐지만, 울산과 경남 22개 선거구에는 여야 통틀어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알렸다.

한편 국제신문은 <민주·통합당 후보 면면 들여다보면 본선 전략이 보인다>(3/19, 6면)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들의 출신·경력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의 본선 전략을 분석하면서 여성 후보자들의 모습만 담긴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일주일 전만 해도, 두 신문은 여성·청년 가산점으로 인한 불리함을 호소하는 경선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했다. 모든 경선이 끝날 즈음에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